

한국정치에서 음모론과 선거의 연관성:

‘장준하 사망’, ‘광주민주화운동’, ‘천안함 침몰’ 을 중심으로

정태일 충북대학교

논문요약

음모론은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해 공식적 원인규명에 대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원인규명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발하는 현상을 말한다. 음모론은 국가와 정부의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에 저항하여 신뢰성에 반발하면서 저항하여 타격을 주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주로 정치적 사건에서 발생하였는데,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정치권력을 안정화시키려는 세력과 정치권력을 교체하려는 보수와 진보의 작용과 반작용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저항한 인물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권세력의 대한 정당성을 불신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또한 광주민주화운동과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전자가 신군부의 정권탈취를 위한 폭력의 정당화, 후자가 남북관계의 단절에 대한 정당화에 근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지만 선거 결과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하였다. 그렇지만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건의 원인규명에 대한 진위논란에서 음모론의 정당성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제어 : 한국정치, 음모론, 장준하 사망, 광주민주화운동, 천안함 침몰

I. 서론

어느 사회이든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 사건들에 대한 수많은 원인 규명은 관점에 따라 새로운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사회는 광복이후 남북분단 상황 속에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도입으로 한국사회의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논란이 생기는 사건들이 존재한다. 특히, 정치적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한 원인규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경우에 다양한 음모론에 빠지는 것에 익숙해지고 있다.

음모론은 사회현상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관점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불신되는 현상을 말한다. 사실 음모론은 그 사회에서 국가와 정부에 대한 다양한 불신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자 저항이다. 왜냐하면 음모론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국가와 정부의 원인규명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여 이에 대한 새로운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보니 음모론은 보편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음모론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게 될 때 음모론은 정치권력의 획득과 반대편의 정치세력에 대한 견제용도로 작동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어 있다.

광복이후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된 한국사회는 격동적인 변화 속에서 국민적 관심을 수반한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어떤 사건은 이에 대한 진실규명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사회적 불신에 따라, 혹은 진영논리에 따라 제각각 다른 해석을 야기시켜 지금까지도 의문과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에서 음모론은 정치적 사안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주의가 미친한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선거와 관련하여 정적의 의문스러운 사망, 집권세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건 등에 대하여 지배세력이 제시하는 공개적인 절차에 대하여 다양한 논증을 통해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정부와 지배세력에 대한 불신

을 바탕으로 정치적인 저항을 하는 모색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음모론은 어떤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성숙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떤 세력들이 정치적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음모론은 지배세력에 대한 피지배세력의 저항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집권세력보다는 비집권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과 관련하여 언급한 음모론적 시각은 혼치 않는 경우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음모론을 분석하여 음모론이 제기되는 정치적 특성을 3가지 사례를 통해 검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한국정치에서 제기되는 수많은 음모론을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모론이 선거공학에 어느 정도 관련되었다고 인식되는 사례인 장준하 사망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천안함 침몰사건을 분석하여 음모론이 지지는 정치공학적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음모론의 정치공학: 인정과 불신에 대한 간극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음모론이 발생하고 있다. 음모론은 어떤 사건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할 때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음모론에는 2가지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음모론은 정당하게 제기되는 것과 왜곡되어 제기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느 것이 정당한 음모론이고, 어느 것이 왜곡된 음모론인지에 대한 구분은 쉽지 않다(유석진 2002, 312-314). 사실 음모론은 이해관계와 목적달성에 따라 때로는 무시되거나 배척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객관적 혹은 상황적 근거가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음모론은 정당한 음모론이든, 왜곡된 음모론이든 어떤 사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대중들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생명력을 더하게 된다. 특히, 정당한 음모론은 어떤 사건에 대한 결정적 증언이나 문건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이해관계에 따른, 혹은 목적달성에 따른 왜곡된 음모론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한국정치는 음모론의 공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복이후 한국정치는 선진국에 비해 역동적인 정치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 이로 인해 한국정치는 음모론이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정치공학적 여건을 제공하였다. 이에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마치 그 자체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이 지속화될 수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윤평중 2004, 121-123).

첫째, 대립과 분열된 정치구조가 초래한 정치의 책략화(策略化) 현상이다. 정치는 근본적으로 대중들에게 정책과 이념을 통해 공생공존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편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조장시켜 국민들을 분열과 갈등으로 내몰아 사회를 혼란시키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대중들을 통합시키는 안정성보다는 대중과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면서 특정 권력집단의 이익을 도모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정책에 기반한 성향보다는 파벌에 근거한 성향으로 정치 전반에 걸쳐 권력집단의 이익극대화를 위한 정치의 책략화가 가속화되었다. 정치의 책략화는 필연적으로 정당하듯, 왜곡되듯 음모론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유도한다.

둘째, 한국정치에 대한 제도적 불신내지 환멸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정책과 이념을 통한 제도화, 즉 정당정치의 실종으로 말미암아 국민들은 정치세력들이 도모하는 제도화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의심하는 성향이 있다. 국민들에게 정치의 제도화는 정략적 계산과 전략게임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으로 정치제도에 대한 음모론을 가지게 하였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환멸을 통해 정치의 선진화를 모색하는 정치적 제도까지도 음모론으로 인식하는 학습효과를 경험하여 정치 전반을 음모론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였다.

셋째, 한국의 역사가 지닌 역동성에서 시작된 저항적 정치지향성이다. 한국의 역사는 강력한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식민지 통치에 의해 시작된 정치권에 대한 저항적 정치지향성은 군사정권까지 지속되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것의 진위논란 여부를 의심하게 한다.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 균형적인 것을 요구하지만 반면에 정치세력은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제로섬 게임방식으로 권력독점을 쟁

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국민들은 권력을 독점한 정치세력에 대한 저항감이 극대화되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 다른 정치세력을 지지함으로써 저항적 정치지향을 보이게 된다.

한편,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한국사회가 지닌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저항감이 용이한데서 기인한다.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이 국민들에게 익숙한 데에는 음모론을 생성하고 유포하는 매체가 다양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음모론에 대한 국민적 호응도가 어느 정도 작용하기 때문이다. 정보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제가 쉽지 않은 정보환경도 음모론이 확산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다. 한국에서 음모론은 '카더라'로 대표되는 유비통신에서 비롯되어 재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음모론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는 애매모호한 인식보다는 반전을 통한 극단적 쾌감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존재하는 한 근절되기 힘든 구조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이 파생되는 이면에는 매스미디어가 주는 영향력이 공정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반발심리가 작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일반적으로 매스미디어는 누적성, 편재성, 공명성이라는 특성을 조합하여 지배여론을 형성하면서 강력한 효과를 유발시킨다. 여기에서 누적성이란 매스미디어의 효과가 여러 메시지에 의해 오랜 시간동안 쌓여간다는 의미이며, 편재성이란 매스미디어가 널리 보급되어 대중들의 생활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공명성은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지만 그들의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매스미디어가 같은 목소리를 표출하면 대중들은 어떤 사건이나 사안에 대하여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이상기 2004, 144-145).

그런데 음모론은 지배담론을 형성하는 언론에 대해 처음에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소문'이나 '설(說)' 등의 가십(gossip)을 통해 객관적 저널리즘이 왜곡되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어 객관적 논증을 통해 새로운 지배담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럴 때 음모론은 다음과 같은 절차과정을 통해 확산되어 가고 있다.¹⁾

1) 음모론의 절차과정은 노엘레 노이만(Noelle Neumann)의 '침묵의 나선' 가설과 쉐퍼(T. J. Scheff)의 '다원적 무지' 가설을 활용하여 필자가 구성한 것이다(이상기 2014).

첫 번째 단계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인식이 공론화를 통해 조장됨으로써 지배적인 여론을 만든다. 이것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제기될 경우에 국민들이 정당하다고 인식되는 것을 언론이 정당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논조를 지속적으로 강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지배적인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처음에 지배적인 여론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여론을 반영한 것이 아닐 수도 있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지배적인 여론을 만드는 것이다. 이 방식은 어떤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찬반에 있어 대등할 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고립되기를 꺼려 개인들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지배적인 여론에 무의식적으로 동조하도록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지배적 여론에 의해 의사소통이 단절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견이 소수집단이라 인식하여 자신의 견해를 숨기게 되면서 침묵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즉, 의도된 침묵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중심적 의식구조를 지니게 되면서 타인의 의중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무시한 채 자기중심적으로 타인의 생각과 행동을 평가하면서 행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음모론의 시작점이 되게 한다.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지배적 여론에 대한 저항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건내지는 이슈에 대해 검증되지 않는 논거를 중심으로 반론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음모론의 확장은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스미디어가 익명성을 지닌 음모론에 대한 비판적 시각보다 가십성 재미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전달하면서 증폭되도록 한다.

네 번째 단계는, 세 번째 단계에서 지배적 여론에 대한 음모론이 증폭되면서 음모론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제기되고, 이를 토대로 음모론은 대중들에게 지배적 여론에 대한 반감으로 조성하게 된다. 지배적 여론에 대한 음모론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해 양산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음모론에 대한 확장내지는 증폭은 대중성을 중시하면서 전문성을 소홀히 하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

비록 음모론이 위와 같은 단계적 절차에 의해 만들어지더라도 그 이면에는 무기력한 대중들이 소외되고 무시되는 현상에 대해 심리적으로 보상받으

려는 경향의 강약에 따라 확장성이 좌우된다. 따라서 음모론은 대부분 입증할 수도, 반증할 수도 어려운 사건이나 이슈를 중심으로 익명성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진다. 사실 많은 종류의 음모론은 논리적으로 입증과 반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모론으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사건이나 이슈에 대한 음모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 정치와 관련된 음모론이 끊임없이 생산되는 것은 음모론에 편승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음모론은 음모론 효과를 얻고자 하는 세력에 의해 음모론을 만든 집단들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고자 의도적으로 음모론이 확대되도록 방치한다. 그 이유는 음모론이 확산될수록 음모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봉쇄하는 조치들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음모론은 음모론이 지닌 폐쇄성으로 인해 음모론이 음모론으로 밝혀질 때는 음모론의 효과를 위해 방치한 정치세력들에게 음모론의 희생양인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근거도 제공된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이 생성되는 것은 대중들의 정치적 결핍내지는 정치적 과잉이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변정수 2004, 152-155). 한국사회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지만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라 비판을 받는다. 선진국들은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가중되어 비판을 받는데 반해 한국사회는 경제적 풍요에 따른 정치적 무관심보다는 정치결핍과 정치과잉이 상존하면서 정치적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보편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모든 국민들이 정치평론가라는 인식을 주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치의 특수상황은 정치담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양산하게 되고, 이것이 음모론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어찌보면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정치세력들에 대한 정치적 불신이 국민들에게 정치적 남용과 정치적 결핍을 통해 온갖 정치공학적인 정치담론을 생산하도록 만든다. 즉, 한국정치에서 정치적 관심은 많은데 반해 정치현상에 대한 정보부족은 정치적 결핍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정치현상에 대한 편협된 정보과잉은 정치에 대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형성하는 반작용을 일으켜 정치에 대한 음모론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Ⅲ. 한국사회에서 정치적 음모론에 대한 검토

1.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

1975년 8월 17일에 장준하는 산악회 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약사봉을 등반하다가 실족하여 추락사 하였다. 하지만 그 당시 정치적,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 재야인사인 장준하의 갑작스런 죽음은 사고사가 아닌 타살이라는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재야인사인 장준하의 사망은 당시 집권자인 박정희와의 관계 속에서 독재자에 의한 희생양이라는 음모론이 유포되었다.

박정희와 장준하는 5.16군사쿠데타를 계기로 양립할 수 없는 갈등관계가 형성되었다. 장준하가 대표로 있던 『사상계』는 1961년 7월호에 함석헌의 “5.16을 어떻게 볼까?”라는 논설을 게재하여 박정희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에 군사정부는 함석헌을 구속하고, 장준하를 입건하였다. 그럼에도 장준하는 지속적으로 『사상계』를 통해 박정희를 비판하였다. 장준하는 5.16군사쿠데타를 비롯하여 한일국교정상화를 굴욕적인 회담이라고 적시하여 한일회담저지투쟁을 전개하였다. 뿐만 아니라 1966년에 삼성계열인 한국비료에서 대량의 사카린 밀수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정경유착의 상징으로 본 야당인 민주당이 동년 10월 대구에서 개최한 재벌밀수규탄대회에서 장준하는 ‘밀수 왕초’는 바로 박정희라고 공격하였다(고상만 2012, 29-30). 이에 박정희정권은 장준하를 국가원수모독죄로 투옥시켰지만 1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그 후 장준하는 신민당에 입당하였다. 1967년 4월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장준하는 박정희를 베트남전쟁에 한국 청년들을 피를 파는 매혈자로 규정하면서 박정희는 국가원수자격이 없다고 비난해 국가원수모독죄로 또 다시 3개월간 투옥되었다. 뿐만 아니라 장준하는 1967년 6월 8일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서울 동대문구구에 옥중 출마하여 당선됨으로써 박정희에게 정치적 내상을 주기도 하였다. 장준하는 1972년 유신헌법에 의해 박정희의 장기집권체제가 강화되자 박정희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강

화하였다. 장준하는 1973년 12월 24일에 개헌청원국민운동본부를 발족시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저항을 노골화하자 1974년 1월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해 구속되어 비상군법회의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장준하는 복역 중 건강악화로 인해 더 이상 수감생활에 어려워 1974년 12월에 석방되었다. 석방된 후 장준하는 1975년 8월 17일에 약사봉에서 실족사하기 전까지 박정희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멈추지 않아 그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음모론이 제기되었다(김삼웅 1993, 44-53).

장준하의 사망에 대한 음모론은 장준하가 박정희정권에 의해 타살되었지만, 이것이 단순한 실족사로 왜곡되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장준하의 사체를 검안한 조철구 박사는 장준하의 사망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였다. 장준하의 사망에 대한 음모론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한 조철구 박사의 장준하 사체에 관한 검안소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접 사망원인이 되고 있는 후측 두부는 우측 귀 뒤에 위치해 해부학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급소로서 넘어지거나 거꾸로 떨어지더라도 쉽게 다치기 어려운 자리이다. 따라서 상처 부위 자체가 의혹을 수반하고 있다. 추락하거나 굴러 귀 뒤에 감추어진 급소가 다칠 정도라면 얼굴이나 머리 부위에 상처가 있어야 할 터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바로 그 자리만 20mm의 원형으로 동그렇게 뼈만 들어간 상태에서 정 가운데서 피가 흘러 나왔다. 이렇게 규칙적인 상처 자체에 의심이 간다. 바른쪽 잔등이에 빗살무늬 모양의 굽힌 자국이 위에서 아래로 나 있는데, 이는 몸체가 거꾸로 끌려 내려갈 때 생긴 것 같다. 바른쪽 한쪽만 그렇지, 다른 부위는 이상이 없는 것이 그 이유다. 두 손바닥 기저부에 상처가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상하다. 양쪽 겨드랑이 모두 피멍이 들었는데, 이는 양쪽 겨드랑이를 잡혀 끌려갈 때 생긴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자살이 아닌 이상 실족했다면 무엇인가를 붙들려는 노력을 무의식적으로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손톱에 이끼도 끼지 않았고, 상처가 하나도 없었다(김삼웅 1993, 306-307).”

장준하의 사망에 대한 조철구 박사의 사체검안내용은 장준하의 직접적인

사인(死因)은 사망이 아니라 뇌좌상이라 설명하였는데, 이로 인해 장준하의 사망은 그 당시 장준하와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음모론이 제기되기에 충분하였다. 장준하의 사망은 이처럼 박정희 대통령과 연관시켜 암살설까지 확대되었다. 박정희에 의한 장준하의 암살설은 조철구 박사의 사체 검안 소견서 이외에도 많은 의문점을 양산하였다.

“실족 추락사라고 하기에는 오른쪽 귀 뒤에 약간의 함몰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골절상이나 외상이 없다. 14-15m 높이에서 추락했는데도 옷이 찢겨나간 데가 없었고, 벼랑 아래쪽에 울퉁불퉁한 바위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커피를 담아간 보온병은 깨지지 않았다. 사고지점까지 도달하기 위한 코스가 험준하여 이 코스를 택하기 보다는 우회해서 하산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단이라 여겨진다. 유일한 목격자인 김용환의 정체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김용환은 1967년과 1971년 선거과정에서 장준하의 선거운동원으로 관계를 맺었지만 그 뒤에는 소식이 절연되었는데, 사고 당일 갑자기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이 목격한 사고경위를 신빙성 있고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검찰이나 경찰이 유일한 목격자인 김용환을 대동하고 현장검증을 실시하지도 않았다. 당시 장준하의 사망에 대한 의문이 많았던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현장검증을 하지 않았다. 김용환이 진술한 장준하와 김용환이 사고지점으로 가는 도중 만난 군인 2명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다(김삼웅 1993, 315-316).”

이처럼 장준하의 사망이 박정희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의문스러운 죽음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었지만 검찰이나 경찰은 끊임없는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장준하를 단순 실족 추락사로 결론지었다. 장준하의 죽음에 대한 음모론은 검찰과 경찰의 의문점 해소에 대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은 채 종결됨으로 인해 아직 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2년 8월에 장준하의 추모공원을 위한 이장과정에서 장준하 두개골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더욱 증폭되었다(고상만 2012, 19-20). 2012년 대통령선거를 앞 둔 시점에 장준하의 유골이 공개되면서 장준하와 박정희와의 관계 속에서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 당시에 새누리당은 장준하 사망사건

이 박근혜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장준하의 유골을 공개하는 데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면서 야당을 비판하고, 장준하 사건의 재조사를 거부하였다.

2.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음모론

1979년 10.26사태는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에 의해 피살된 사건이다. 10.26사태 이후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은 혼란스런 정국을 이용하여 12월 12일에 군사쿠데타를 일으켰다. 박정희정권부터 시작된 군부정치에 반감을 가진 학생과 시민들은 1980년 5월에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하자 민주항쟁시위를 주도하였다. 이에 전두환의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에 ‘정치활동규제, 집회금지, 언론통제,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 휴교’를 골자로 하는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시켰다. 광주민주화운동은 비상계엄령이 광주지역으로 확대된 1980년 5월 18일에 비상계엄군이 전남 광주의 전남대학교를 장악하여 학생들의 등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비상계엄해제를 요구하는 학생들과 비상계엄군 간의 충돌로 발생하였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일반 시민까지도 구타하는 등 과잉진압이 발생하면서 광주 전역에서 신군부에 대한 저항은 5월 27일까지 지속되었다.

한편, 1980년 5월에 발생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신군부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저항이기보다는 북한이 광주민주화운동에 연관되어 있다는 음모론이 신군부에 의해 제기되었다. 즉, 음모론의 핵심은 광주민주화운동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 1979년 12월 12일에 하극상에 의한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이 시작되자 전두환 등 신군부의 정권장악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 들어갔다. 신군부는 정국안정과 강한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위해 반공이데올로기를 이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신군부는 일부에서 제기되는 북한의 남침설을 활용해 비상계엄령의 유지와 5.17계엄 확대조치를 감행하였다. 다음은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표한

‘북한의 남침설’에 관한 내용이다.

“1980년 5월 10일에 중앙정보부 2차장 김영선은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짙다는 ‘북괴 남침설’ 첩보를 일본 내각조사실로부터 입수하여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보고하였다. 보고내용은 북한은 한국정부가 1980년 4월 중순경에 김재규를 처형할 것으로 예상하고 김재규 처형 시에는 항의데모사태가 발생하여 남침을 위한 결정적 시기가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여 남침시기를 4월 중순경으로 예상하였으나 김재규의 처형이 지연됨에 따라 연기하여 오던 중 1980년 5월에 들어 학생과 근로자의 소요사태가 격화되자 소요사태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1980년 1월 15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남침을 감행하기로 결정했다(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362-366).”

하지만 그 당시에 육군본부 정보참모부는 ‘북한 남침설’은 북한의 일반적 남침 가능성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군부의 전두환은 결국 ‘북한 남침설’을 유포하여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키는 명분으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신군부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신군부의 과잉진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위가 남한에 침투한 북한의 고정간첩들이 광주민주화운동을 확대시켰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 5월 21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회성은 담화문에서 ‘오늘의 엄청난 사태로 확산된 것은 상당수의 타 지역 불순인물 및 고정간첩들이 사태를 극한적인 상태로 유도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고장에 잠입하여 터무니없는 악성 유언비어의 유포와 공공시설의 파괴 및 방화, 재산약탈행위 등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난동행위를 선동한데 기인된 것이다’고 발표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이 불순분자와 고정간첩들에 의한 계획적인 반국가행위라고 하였다. 또한 1980년 5월 23일 대간첩대책본부 회의에서 신현철 본부장은 ‘북괴가 광주지역에 소요사태를 틈타 불순분자와 고정간첩을 시위 군중 속에 잠입시키고 순박한 시민들에게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사회혼란을 극대화시킬 우려마저 있다’고 발언하여 신군부가 본격적으로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과 연계시킬 것을 암시하였다. 그 후 신군부는 언론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이 고정간첩과 연계된 것처럼

대중을 선동하였다. 1980년 5월 26일 경향신문에 간첩 이창용에 대한 내용을 기사화 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첩 이창용은 지난 20일 새벽 2시 안내원 2명의 인도아래 남해안으로 침투하여 21일 야간 순천에 도착, 광주 잠입을 시도했으나 군경의 검문검색이 심하고, 모든 진입로가 차단되어 포기, 순천에서 1박하고 야간열차를 이용 23일 새벽 5시에 서울역에 도착, 거점 확보 공작 중 경찰에 검거되었다. 최근 국내 도처에서 일고 있는 소요지역에 침투하여 학생, 종교인, 노동계층을 선동하여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 공공기물 파괴, 태파업 선동 등 단기 공작을 주요 임무로 하고…(경향신문 1980.5.23.)”

그런데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는 간첩 이창용의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과 비교할 때 이창용은 6월 16일 전남 보성을 통해 침투했으며, 광주에서의 시위와는 상관없이 남파하였고,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임무나 광주로 진입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발견할 수 없다고 기록하였다(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431). 한편, 탈북자 이창용씨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고 하여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북한과 관련된 음모론에 반항을 일으켰다. 이창용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군인연합’은 2006년 12월 20일에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하였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한의 모든 크고 작은 소요에는 빠짐없이 북한의 공작이 개입돼 있다. 5.18때, 광주에 600명 정도의 특수군이 투입됐다. 남한에 있는 탈북자 중에서는 5.18때 광주에 왔다가 돌아간 후 탈북해온 사람이 현재도 있다. 광주 사태에 투입됐던 특수부대원 중 상당 부분이 지금도 남한에 남아 있다. 광주사태에 참여한 사람들 중 62명이 북한에서 영웅으로 추대됐다.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가 갔다 온 사실들은 북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어쩌서 남한 사람들만 이를 부정하는가?”²⁾

2) <http://blog.daum.net/smj4210/15716264>(검색일: 2017.1.10.)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음모론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가 자신들의 불법적인 정권장악을 국가적 위기상황이라는 명분아래 자신들의 과도한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것에 대한 의문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음모론은 그 자체가 북한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활용하는 특성을 지녔다. 신군부는 당시 국시였던 반공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정권탈취에 필요한 비상계엄령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을 강경 진압하는 명분으로 진위여부를 떠나 북한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음모론을 유포한 것이다.

3.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음모론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30분경 백령도 남서쪽 1km 지점에서 훈련 중인 천안함이 폭발로 인해 선체가 두 동강 나면서 침몰하였다. 침몰된 천안함은 4월 15일에 함미가 인양되어 민군합동조사단은 인양 다음 날인 4월 16일에 외부에 의한 폭발 가능성이 높다는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였고, 4월 24일 함수 인양 결과 오른쪽이 6m 가량 더 유실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민군합동조사단은 수중 비접촉 폭발로 천안함이 침몰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5월 20일에 민군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음향자장복합감응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되어 침몰하였다고 확정하였다. 그렇지만 천안함 침몰과 관련하여 한국사회에서는 선체노후화(피로파괴설)나 외부의 공격, 암초로 인한 좌초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첫째, 해경이 좌초로 보고받고 충돌했다는 점이나 어뢰의 항주음이 들리지 않았다는 점, 스쿠류가 휘어진 모양이 후진하면서 흰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처음에는 좌초설이 주목을 받았다(이정훈 2012, 54). 그렇지만 후진이 불가능한 배의 특성과 암초에 해군함이 침몰했다는 현실과 괴리, 측면 중간 부위가 찢어진 채 인양된 선체로 말미암아 좌초설은 설득력을 얻는데 한계를 보였다.

둘째, 천안함 침몰 당시 폭발음이 있었고, 지진파 감지기에도 폭발형 파장이 잡혔다는 점과 절단면의 형태를 보아 폭발로 인한 침몰인 것이 유력해지면서 국군이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던 기뢰가 폭발한

것이거나 북한군이 설치했던 지뢰가 떠내려 온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김보근 2011, 44-46). 그러나 이것도 수십 년이 지난 지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천안함이 침몰한 지역이 지역어민들의 조업 지역이라 지뢰가 터졌으면 이미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현실성이 떨어졌다.

셋째, 천안함의 중앙 부분이 두 동강나면서 침몰에 하였다는 점에서 피로 파괴설도 대두되었다. 하지만 용접면을 비롯한 접합 부분이 분해되어 천안함이 침몰되었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천안함이 인양되었을 때 천안함이 찢어졌다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배가 안으로 굽어져 외부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피로파괴설은 과학적으로 현실성이 없어 억측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설이었다(강태호 2012, 95).

넷째, 잠수함 침몰설이다. 경성대학교 김항수 교수와 케임브리지대학교 코레스타(Mauro Caresta) 교수는 천안함 침몰 당시 백령도에서 관측된 지진파 주파수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이 잠수함과 충돌해 침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³⁾ 당시 지진파가 저주파인 8.5Hz 기본 진동수의 주파수에서 강한 피크 진폭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지진파는 8.5Hz의 정수배(2·3·4배) 주파수에서도 차례로 강한 피크 값을 보이는 ‘조화 주파수’ 형태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수중 폭발에 의한 지진파에서는 이러한 조화 주파수를 가진 지진파가 나타나지 않으며, 잠수함을 기하학적 형태의 금속 물체(튜브형)라고 가정하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튜브형 금속 조형물 축 진동의 고유 진동수 스펙트럼과 지진파 관측 결과가 ‘만족스럽게’ 일치하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⁴⁾ 그렇지만 국방부는 잠수함의 충돌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⁵⁾

다섯째,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설이다. 이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한국 정부는 천안함의 침몰원인을 규명하고자 민군합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즉, 민군합동조사단은 한국을 포함한 호주, 미국, 스웨

3) <https://www.hindawi.com/journals/aav/2014/514346/>(검색일: 2017.1.30.)

4)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cd=2975504>(검색일: 2017.1.30.)

5)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02_0013331779_&cID=10304&pID=10300 (검색일: 2017.1.30.)

덴, 영국 등 5개국에서 24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군합동조사단은 2010년 5월 20일에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한국 정부가 천안함이 북한군의 어뢰공격에 침몰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것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해역에서 프로펠러, 추진모터, 조종장치 등이 수거되었고, 이는 어뢰의 추진동력부로서 결정적인 증거물이라고 하였다. 정부는 천안함 침몰에 사용된 북한의 어뢰는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크기와 형태가 일치하며, 추진부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 표기는 정부가 확보하고 있는 북한의 어뢰에 “4호”라고 표기된 표기방법과 일치한다. 당시 일부 인사들과 인터넷 등에서 북한에서는 1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최근 장성택의 처형사건에서 1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확인되었다.⁶⁾ “1번이란 글씨는 제조과정에서 기술자들이 써놓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완성품은 알루미늄 외피로 싸여 있어 이를 사용하는 북한군은 내부에 글씨가 있는지 몰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29일 합동조사단은 증거물로 제시한 CHT-02D 어뢰의 설계도는 CHT-02D의 설계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와 다른 별개의 북한 중어뢰인 PT-97W 어뢰의 설계도였다고 밝혔다.⁷⁾ 정부는 5월 20일 공식 발표 때 총 3종의 CHT-02D 도면이 발표되었으며, 그 중 실물 크기의 수미터 도면이 잘못 발표되어 추후 실물 크기의 CHT-02D 도면을 다시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6월 22일에 “천안함을 공격한 어뢰와 동일 기종으로 지목한 북한제 어뢰를 홍보하는 카탈로그에 북한의 국가명이 표기됐다”며, “북한제 어뢰를 홍보하는 카탈로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보증한다’는 문구가 명기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로 미루어 볼 때 카탈로그가 북한 정부가 제작한 게 확실하다”고 말했다.⁸⁾

결과적으로 천안함의 침몰사건에 대한 다양한 침몰원인이 논의되는 와중에 정부가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에 의해 침몰하였다고 확인하자 천안함 침

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4/2013121400231.html(검색일: 2017.1.30)

7)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8069.html(검색일: 2017.1.30.)

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842195>(검색일: 2017.1.30.)

몰사건에 대한 음모론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2010년 6월 1일에 천안함 침몰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방한한 러시아조사팀은 수중폭발이라는 조사결과에는 동의했지만 어뢰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⁹⁾ 탐사저널리스트 웨인 매드슨(Wayne Madsen)은 ‘글로벌 리서치’에 기고한 글에서 천안함 사건은 미국 특수부대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이용해 일본의 오키나와 해군기지 존속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주장하였다.¹⁰⁾

4. 음모론과 선거와의 연관성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각종 선거와의 연관성 속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음모론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선거과정에서 승패를 위한 전략적 가치에서 비롯되어 선거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준하 사망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천안함 침몰사건에 관련된 선거결과는 음모론에 의해 변화되었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장준하 사망사건과 관련된 2012년 대통령선거이다. 장준하 사망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2012년 8월에 장준하 추모공원조성이 추진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었는데, 그 당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렇지만 2012년 12월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장준하 사망사건과 관련된 음모론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과반수가 넘는 51.6%로 당선되었다. 제18대 대통령선거는 야권의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보수와 진보가 양대 세력을 구축하여 첨예한 양자대결구도로 전개되었지만 박근혜 후보가 호남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당선되었다(정태일 2013, 313).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된 장준하 사망사건이 재조명되는 선거환경의 변화 속에서 음모론이 새로운 선거변수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9)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788042>(검색일: 2017.1.30.)

10)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363513>(검색일: 2017.1.30.)

둘째, 광주민주화운동 음모론과 관련된 선거는 1981년 3월에 실시된 제 11대 국회의원선거이다. 제11대 국회의원선거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음모론에 의해 호남의 민심이 신군부에 적대적인 선거환경 속에서 실시되었다. 제11대 국회의원선거는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이 전체 276석 중 151석으로 54.7%의 국회의석을 차지하여 안정적인 정국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광주민주화운동의 음모론에 가장 민감한 호남지역에서도 전체 36석 가운데 17석(47.2%)을 차지하여 음모론이 커다란 영향을 행사하지 못했다. 물론 제11대 국회의원선거가 지역구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집권당인 민주정의당에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음모론의 피해당사자인 호남지역도 광주민주화운동의 음모론에 대해 다소 무감각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정태일 2015, 294-295).

셋째,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이 관련된 선거는 2010년 6월에 실시된 제5대 전국동시지방선거였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8년 국민건강주권과 관련된 쇠고기로 인한 촛불집회, 2009년에는 전 대통령인 노무현과 김대중의 서거로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고전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런 와중에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 변수라는 극적인 반전효과를 유도하여 보수층의 결집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다양한 분석이 제기되었다. 즉,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북한변수, 즉 북풍이 작용하여 안보문제가 선거환경을 변화시켜 전통적으로 지방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는 전례를 한나라당이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예측되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국민들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북풍(안보이슈)에 대해 무감각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북한변수에 민감한 강원도 지역의 지방선거에서 광역자치단체장에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당선된 것에서 알 수 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음모론이 어느 정도의 진실을 포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모론 그 자체로서는 각종 선거에서 선거변수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왜냐하면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선거정국에서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속성으로 인해 선거를 위한 음모론이라는 태생적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IV. 결론: 음모론이 지닌 정치성

한국사회에서 음모론은 장준하 사망사건, 광주민주화운동, 천안함 침몰 등의 사례에서 보듯 한국정치의 이분법적 정치구조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다양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는 집권세력이 정치적 안정화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소위 저항세력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 음모론이 발생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분단이라는 태성적 한계에 직면한 한국정치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극단적 정치사건을 한국사회 내부에서 원인을 찾기 보다는 북한이라는 변수를 통해 정치적 안정화내지는 정치적 이득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이다.

먼저, 장준하의 사망은 집권세력이 정치적 안정화에 위해(危害)가 되는 요인을 제거했다는 차원에서 제기된 음모론이다. 장준하 사망사건은 대립과 분열된 정치구조가 만든 정치의 책력화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 장준하 사망에서 보여주는 음모론은 선진국의 정권교체가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저항감의 표현이다. 당시 한국정치는 박정희에 의한 장기집권이 국민적 반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대세력의 조직적 반발심리가 작동하는 상황에서 권력집단인 박정희 세력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차원에서 장준하를 타살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이다. 장준하의 사망사건은 집권세력이 죽음의 실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기되는 음모론에 대한 구체적 반박 증거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기되었다. 반면에 장준하의 사망사건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하는 세력은 구체적 반박자료 등을 통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여 음모론의 실제적 진실에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장준하 사망사건과 관련된 음모론은 정치적 책력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음모론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인식의 공론화, 즉 매스미디어를 통한 대중의 확장성에서 한계에 직면하였다. 즉, 장준하 사망사건은 집권세력에 대한 반발심리를 통해 집권세력의 교체를 도모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집권세력을 와해시킬 수 있는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음모론 그 자체가 집권세력에게 심

각한 타격을 주는 국민적 동조화에 실패하였다.

다음으로 남북분단에 따른 한국정치의 태생적 문제로 초래되는 북한과 관련된 음모론이다. 북한과 관련된 음모론은 한국정치의 비극이다. 한국정치에서 북한은 집권세력의 정치적 사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도구적 역할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은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내지는 환멸에 대한 정치적 저항성이라 볼 수 있다. 한국정치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사건이 국내적 변수에 의해 발생한 것이기보다는 북한의 변수에 의해 발생했다는 집권세력의 공식적인 발표에 대해 진위논란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북한 변수를 통한 음모론은 지배세력이 자신들의 이익을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다.

광주민중화운동에서 제기된 음모론은 신군부가 정권탈취과정에서 발생한 국내의 정치사회적 혼란을 국내의 문제가 아닌 외부세력, 즉 북한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발생시켰다는 것이다. 지배세력은 그 당시 국내적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폭력의 정당화가 필요함에 따라 북한이라는 변수를 활용하여 국민적 설득작업을 병행하였다. 광주민중화운동에 대한 음모론은 그 당시에도 그 정당성을 의심받았으며, 나중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으로 음모론 그 자체가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민중화운동에 대한 음모론은 다양한 시각에서 논란의 여지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천안함의 침몰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등장한 가운데 정부가 민군합동조사단을 통해 침몰원인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천안함 침몰에 대한 음모론은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이전과 이후에도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렇지만 천안함 침몰사건은 한국과 북한과의 특수관계 속에서 남북한의 합동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음모론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데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북한 변수를 통해 지배세력이 자신의 정치적 안정성을 공고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천안함 침몰에 대한 부인과 국제전문가들의 의혹제기는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정치에 정치적 사건에 대한 음모론은 위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한국

정치의 극단적인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양상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지배세력이 체제안정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적 설득과정을 무시한 채 사건을 종결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다. 사실 음모론은 한국정치에서만 파생되는 것은 아니기에 음모론 그 자체를 가지고 한국정치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정치에서 북한 변수라는 음모론이 진실여부와 관계없이 지속화된다면 한국정치에서 음모론은 국민적인 저항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진보냐, 보수냐 하는 이분법적 시각을 버리고 한국의 정치권은 음모론이 등장할 수 있는 변수를 제거하기 위하여 전문가에 의해 투명한 조사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 또한 국민들도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잣대를 통해 정치적 사건을 인식하지 말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치적 사건을 수용하는 객관적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참고문헌

- 강태호. 2010. 『천안함을 묻는다 : 의문과 쟁점』. 파주: 창비
-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2007.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종합보고서 제2권 상편』, 서울: 국방부
- 고상만. 2012. 『장준하, 묻지 못한 진실』. 파주: 돌베개
- 김보근. 2011. 『천안함의 진실 : 20개의 키워드로 읽는 천안함 사건』. 서울: 한겨레출판
- 김삼웅. 1993. 『민족주의자의 죽음』. 서울: 학민사
- 변정수. 2004. “일상의 정치적 무기력이 빛은 과잉 정치담론: 음모론의 대중심리”, 『당대비평』 제25호, 152-155.
- 유석진. 2002. “음모론과 정치”, 『관훈저널』 제43권 여름호, 312-314.
- 윤평중. 2004. “음모담론의 동학과 구조: 한국사회의 일그러진 자화상”, 『당대비평』 제25호, 121-123.
- 이상기. 2004. “음모론의 나팔수, 언론”, 『당대비평』 제25호, 144-145.
- 이정훈. 2012. 『천안함 정치학』. 서울: 글마당
- 정태일. 2013. “제6공화국의 대통령선거에 관한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제18집 제4호, 313.
- _____. 2015. “한국에서 지역주의의 정치적 효과”, 『한국동북아논총』 제20집 제3호, 294-295.
<http://blog.daum.net/smj4210/15716264>(검색일: 2017.1.10.)
http://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28069.html(검색일: 2017.1.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2/14/2013121400231.html(검색일: 2017.1.30.)
<http://news.kbs.co.kr/news/view.do?ref=A&nacd=2975504>(검색일: 2017.1.3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788042>(검색일: 2017.1.30.)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842195>(검색일: 2017.1.30.)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363513>(검색일: 2017.1.30.)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1202_0013331779&cID=10304&pID=10300(검색일: 2017.1.30.)
<https://www.hindawi.com/journals/aav/2014/514346/>(검색일: 2017.1.30.)

투고일 : 2017년 2월 20일 · 심사일 : 2017년 3월 19일 · 게재확정일 : 2017년 3월 22일

* 정태일은 충북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충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고대서양정치사상연구』, 『중세서양정치사상연구』, 『평화사상연구』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칸트 영구평화론의 정치철학적 조명,” “20대의 탈정치화에 대한 비판적 논의,” “제6공화국의 대통령선거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Abstract>

A Critical Review of Political Conspiracy in Korea

Chung, Tae-Il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conspiracy theories of political events are occurring in every country and society. In Korean society, conspiracy theories about political events are constantly happening. Conspiracy refers to the phenomenon of a particular individual or group who oppose the official causes of social phenomena. Conspiracy is a resistance to the credibility of the state and the government. In Korean society, conspiracy occurs mainly in political events. The conspiracy theories of political events appear in the form of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which seeks to replace political power and political power to stabilize political power. The conspiracy theory about Jang Jun-Ha's death occurred in the process of seeking justification for a person who is resisting the ruling forces. Also, the conspiracy theory of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and the Cheonan Warship Sinking may be a drag on the justification for the justification for the takeover of the new military government and the justification for the Disconnection of inter-Korean relations. In Korean politics, Conspiracy theory is a factor that confuses Korean society regardless of whether it is true or not.

Key Words : Korean Politics, Conspiracy Theory, Jang Jun-Ha's Death,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Cheonan Warship Sinking